



농어촌 서비스 기준, 그 성과와 과제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전문가 기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 성과와 과제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 **정도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농림축산식품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

개 요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 현장 실무자, 주민 등의 의견을 담고자 한다.

이슈리포트 제6호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 규정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살펴보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13조). 주민들이 농촌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얼마만큼 공급해 줄 것인지를 정부가 약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호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농어촌 주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혹은 제도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자한다. 이를 위해 본 호에서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의 연혁을 설명하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중 핵심 항목 및 선택 항목에 대하여 그 성과와 개선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부터 농어촌 주민을 위한 기초 생활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책 관심이 증가하였다(송미령 외 2009). 이전까지는 취약계층에 한정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두었으나,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국민 삶의 질 증대에 목적을 둔 공공 서비스 공급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 8대 공공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검토와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정부는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1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에서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 내용에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에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8대 부문 31개 항목으로 설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고시’로 공표하였다. 2013년부터는 ‘안전’ 부문을 신설하고 그 하위에 ‘경찰 순찰’ 항목을 두어 9대 부문 32개 항목으로 운영하였다. 이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농어촌 서비스 기준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했다. 그리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이원화하였다. 핵심 항목은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기준으로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국가 최소 기준’으로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영된다. 선택 항목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는 항목이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의 내용과 점검 방법은 무엇인가?

핵심 항목은 정부가 제사관리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으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는 핵심 항목에 대한 중기 목표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중기 목표치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기간(2015~19) 동안 항목별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다.

표 1 >> 제3차 삶의 질 계획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 및 중기 목표치

부문	핵심 항목	국가 최소 기준	'14년 (%)	중기목표치 (%)
보건 복지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76.8	80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 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1.8	97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4.1	80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71.0	80
교육 여건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98.1	100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21.1	40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88.3	95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62.9	82
	난방	읍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50.8	70

부문	핵심 항목	국가 최소 기준	'14년 (%)	중기목표치 (%)
	대중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90.4	100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77.3	90
경제 활동 일자리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100
문화 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92.0	100
환경 경관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9.4	85
안전 (생활 안전)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32.7	60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	100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45.4	55

자료: 엄진영 외(2015) 『2015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핵심 항목은 공식 통계, 협조 자료, 행정조사 자료를 집계·분석하여 점검한다. 22개 세부 기준 지표의 수치를 산출하고 수치의 증감 여부와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 제3차 삶의 질 계획에서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보건 복지	1) 진료 서비스	(일반 병의원, 한방병의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한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i) 전국가업체조사(읍·면단위 제공) 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데이터 공식통계
	2) 응급 서비스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지자체 조사: 산부인과·물리치료 소방방재청: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 소요시간 자료(혹은 평균소요시간) 행정조사 협조자료
	3)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도움이 필요한 노인 수)}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현황 포함) 지자체 행정조사: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서비스 수혜자 현황 공식통계 행정조사
	4) 영유아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i) 행자부 : 전국 읍·면별 영유아 현황(주민등록인구데이터) ii) 보건복지부 : 읍·면별 보육시설 현황 공식통계
교육 여건	5) 초·중학교	(운영 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읍·면별 학교 현황 협조자료
	6) 평생교육	위 학교 중 스쿨버스 등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교육부 평생교육통계 협조자료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통계청 협조자료 협조자료
	8) 상수도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인구) × 100	환경부: 상수도현황 공식통계
	9) 난방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수/(읍·면지역 총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현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협조자료
	10)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통계청 :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지자체 조사: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 공식통계 행정조사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경제 활동· 일자리	11)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통합망 행정리 수 / 총 행 정리 수) × 100	방송통신위원회 :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현황	협조자료
	12)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 팅·교육	시·군별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 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행정조사
문화· 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 그램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점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 설총람) :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협조자료
		(공연프로그램 공연 횟수 + 전시 프로그램 전시 일수) / 12 *1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 회) : 전국 지방문화원 문화 프로 그램 운영 현황	협조자료
		(공연예술 공연 횟수) / 4 *1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 터) : 문화예술회관별 공연 현황	협조자료
환경· 경관	14) 하수도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시·군별 인구 수) × 100	환경부 : 하수도 보급현황	공식통계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경찰청 :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협조자료
	16) 경찰 출동	범죄취약 지역 마을 별 1일 1회 이상 순찰 여부	경찰청 : 범죄취약지역, 마을별 순찰 횟수	협조자료
	17) 소방 출동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5분 이 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방재청 : 각 시·군별 화재 출 동 건별 도착소요시간	협조자료

자료: 엄진영 외(2015) 『2015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은 무엇인가?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다. 선택 항목은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에 2015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9개 시·도연구원이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9개 시·도별로 선택 항목을 선정하고 점검하였다.

표 3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 확정 현황(2016. 11.30)

지역	삶의 질 정책 부문							계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경기	2		2	2	2			8
강원		3	1	1	1			6
충남	3		1				2	6
전북	2	1	1	1	2		1	8
경북	1	1	1	2	1			6
경남	1	1	2	2	1	1		8
제주		1		4	1		1	7

2016년에는 선택 항목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선택 항목의 제도화는 선택 항목의 공식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목표치 설정,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으로 구분된다. 2016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7개 시·도에서 선택 항목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2019년도까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조례 제정은 선택 항목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신설하거나, 농어촌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선택 항목의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추진 중에 있다.

확정된 선택 항목에 대해서는 핵심 항목과 마찬가지로 점검을 수행한다. 공식통계, 행정조사를 집계·분석하여 시·군 지자체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차원의 정책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참고문헌

- 1 송미령·김광선·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수립방향 연구』.
- 3 엄진영·유은영·류재현. 2015. 『2015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 성과와 과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가는 왜 농어촌 지역에서 공공서비스의 최소 수준을 제시하고 달성하려 하는가?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 가입한지 올해로 20주년이다. 양적인 성장 부분에서 OECD 회원국 중 두각을 나타냈지만,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에선 38개 회원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농촌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에 비해 낮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범정부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 서비스 공급 및 삶의 질의 도·농간 격차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¹⁾

이는 농어촌의 여건 변화와 특수성에 대해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채 일률적으로 재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4년 이래로 해마다 실시한 도시·농촌주민 정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삶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 보다 지속적으로 높다.

기 때문이라고 인식되고 있다(김광선 외, 2014). 따라서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증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체감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2010년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도입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된다. 즉,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국가가 정책 목표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광선 외, 2014). 이와 같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 독일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공평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국가 관리항목인 농어촌 서비스 기준(핵심 항목)이다. 이것은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하는 ‘국가 최소 기준’의 의미를 갖고 운영하는 기준이다. 다른 하나는 광역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의 여건과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인 ‘선택 항목’이다. 이 기고에서는 먼저 ‘국가 최소 기준’으로써의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즉, 국가가 국민에게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어떠한 성과를 이루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하여 논의하려는 것이다.

‘핵심 항목’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나?

국가 최소 기준인 ‘핵심 항목’은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문화·여가, 경제활동·일자리, 환경·경관, 안전 등 7개 부문, 17개 세부항목, 22개 세부기준으로 구성된다. 각 핵심 항목 세부항목별로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은 해마다 서비스기준 이행 실태뿐만 아니라 각 시·군별 중기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 한다.

2016년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은 현재 점검 진행 중인 관계로 최종 점검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부문 별로 점검이 완료된 항목에 대하여 점검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표치에 1~2% 이내로 근접한 항목은 아직까지 없다. 초·중등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들은 아직도 목표치까지 갈 길이 먼 상태이다.

핵심 항목의 점검 결과를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보건복지 부분의 ‘노인’과 ‘영유아’ 항목의 서비스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영유아 항목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진료서비스의 경우는 2016년에 달성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산부인과 진료 등에서 농어촌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평생교육, 응급서비스, 상수도, 난방, 광대역통신망, 문화·여가, 하수도, 방법설비 항목은 조금씩 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²⁾ 주택, 대중교통, 경찰출동, 소방출동 등의 경우는 점검 통계 자료의 한계와 자료 협조가 되지 않아 목표치 달성 점검이 어려운 상태이다.

2) 응급서비스, 광대역통합망의 경우는 2016년 자료가 집계되지 못했지만, 그간의 추이로 판단하였음.

표 1 >> 핵심 항목 이행실태의 변화

부문	핵심 항목	'14년(%)	'15년(%)	'16년(%)	추세	목표치(%)
1. 보건 복지	1) 진료서비스	76.8	76.8	73.9	↘	80
	2) 응급서비스	71.8	98.4	—	비교 불가	97
	3) 노인	74.1	71.8	70.1	↘	80
	4) 영유아	71.0	69.7	69.2	↘	80
2. 교육 여건	5) 초·중학교	98.1	97.5	98.2	비교 불가	100
	6) 평생교육	21.1	21.8	—	비교 불가	40
3. 정주 생활기반	7) 주택	88.3	88.3	88.3	—	95
	8) 상수도	62.9	67.8	69.3	↗	82
	9) 난방	50.8	53.1	57.0	↗	70
	10) 대중교통	90.4	90.4	90.4	—	100
	11) 광대역 통합망	77.3	85.8	—	비교 불가	90
4. 경제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	67.3	67.4	↗	100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92.0	91.3	92.0	↗	100
6. 환경·경관	14) 하수도	79.4	80.8	81.0	↗	85
	15) 방범설비	32.7	35.8	43.2	↗	60
	16) 경찰 순찰	100.0	—	—	비교 불가	100
	17) 소방 출동	45.4	41.1	—	비교 불가	55

주: 1)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향상된 경우 ↗, 정체된 경우 —, 하락한 경우 ↘로 나타냄.

2) 응급의료 항목의 경우는 자료 구축 상의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초·중학교 항목의 경우는 점검 방식이 변경되어 비교가 불가능함.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은 '15년도에 신설된 항목으로 '16년에는 미세하게 증가하며, 경찰 순찰, 소방 출동의 경우는 자료의 협조가 되지 못해 점검을 하지 못함.

농어촌 서비스 기준,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의 향상과 관계가 있나?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들이 직접적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얼마나 유도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에서는 해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내용을 담아 삶의 질 정책 부문별 농어촌 주민 만족도를 주민 설문³⁾을 통해 측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직접적인 성과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성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문별로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 부문 평균 점수는 2016년 5.62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4년도 평균 점수 5.26점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2016년을 보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부문은 안전(6.57)과 정주생활기반(6.20)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5.94), 환경·경관(5.82)이 평균 이상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교육(5.37), 경제활동·일자리(4.83), 문화·여가(4.63)부문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문화·여가 부문은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받았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항목별 달성 정도와 해당 항목의 주민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얼마나 달성되었느냐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달라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별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의 추이를 보면,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안전’ 부문은 지속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

3) 설문조사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2014년에는 1,168명, 2015년에는 1,775명, 2016년에는 2,337명을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수행하였다. 각 세부 문항들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질문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만족도 조사의 각 부분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과 동일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문 문항도 서비스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 대략적인 성과를 유추해 보는 것에는 무방할 것이다.

한 부문의 만족도 점수의 평균 점수 또한 동일 부문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 정도 상승률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 부문의 경우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 점검 결과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와 영유아 부분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대역 통신망, 경찰순찰 등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률이 가장 높은 편인데, 실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농어촌 주민들은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만족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만족도 등이 가장 높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 항목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률이 증가할수록 그 부문의 주민 만족도도 상승하고, 달성률이 감소할수록 그 부문의 주민 만족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정책이나 사업과 직접 연결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달성률이 높아지면 주민 만족도도 증가한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표 2 >>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의 변화

(단위: 점)

부문	평균 점수				세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보건·복지	5.69	5.62	6.19	6.36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5.81	5.87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5.16	5.65	5.51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5.74	6.02	5.96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5.88	5.92	6.00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	4.94	5.27	5.72	5.63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5.49	5.29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68	5.26	5.20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 그 성과와 과제는?

부문	평균 점수			세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정주 생활 기반	5.29	5.78	6.52	6.35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4.97	5.75	6.09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4.82	6.01	6.10 6.20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이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5.57	5.70	5.80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6.71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016년 신규)
경제 활동· 일자리	4.28	4.15	4.62	4.76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4.55	4.77	4.89 4.83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4.29	4.83	4.77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 여가	3.15	3.55	4.80	4.76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77	4.59	4.50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 경관	5.79	5.72	6.30	6.21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5.90	5.04 5.82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83	6.36	6.18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전	6.53	6.73	6.70	6.73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37	6.32	6.36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81	6.96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34		6.42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2016년 신규)
				5.87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2016년 신규)
전 체	5.09	5.62	5.62	

주: 1)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2015년, 2016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사용함에 유의.

2) 부문별 세부 항목 구성은 각 연도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향후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오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착되어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

지난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관련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연구에서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다양한 수요 차이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농어촌 서비스 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주민 체감 부족,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점검을 위한 공식통계의 부재,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의 홍보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하고 있었다(김광선 외, 2014; 엄진영 외, 2015). 따라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는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수요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서두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분리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성공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첫째, 여전히 삶의 질 향상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이 농어촌 서비스 기준 내용과 연계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9년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심도 깊게 살펴보고 개선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목표치 설정이 현실에 맞는 그렇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계가 없거나 관련 부처의 협조가 되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점검되지 못한다면 정책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

리 주제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그 실효성을 갖게 되어 각 부처가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체감 부족 및 홍보 부족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해야한다. 근래에 이르러 다행히 광역 지자체는 자신들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인 선택 항목을 만들고 그 목표치를 설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 차원을 넘어 기초 지자체까지 이어지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표 설정과 목표치 제시가 아닌 지자체의 실천적 의지가 담긴 추진력이 필요하다. 즉,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지자체의 역량을 투입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광선·엄진영·박유진·강민정, 2014, 『2014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엄진영·유은영·류재현, 2015, 『2015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기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

정 도 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도입 배경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도입은 도·농 간 삶의 질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농어촌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기초 공공서비스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이전 농촌 개발 정책이 하드웨어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추진되어 지역민의 특수성, 다양한 수요의 반영이 어려운 구조였다. 또한 일률적인 재정 투자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추진되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효율성, 효과성이 저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광선 외 2014).

2011년 1월부터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제3차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015~2019)단계에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이원화 하여 현재 운용 중에 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중 선택

항목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의 초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공급 실태에 대한 점검의 목적에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도입되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농어촌 전체 지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항목으로, 농어촌 전체 지역을 대표하지 못하였다. 또한 초기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도입·운용된 까닭에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의 다양한 수요 차이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농어촌서비스 기준 도입 당시 제시되었던 문제인식과 개선과제가 계속해서 나타난 것이다. 즉 선택 항목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 초기 항목이 다양한 농어촌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개선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는 최근 나타나는 농어촌 공간의 분화वाद도 관련이 있다. 과거 농어촌 지역은 균등한 지역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정책 수단이 농어촌 지역 전체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 지역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대도시와의 접근성, 정주체계에서 해당 지역의 위상,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다각화활동 등에 의해 인구·사회 변화 경로가 다양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는 동일한 농촌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공공서비스 부문의 수요는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의 충족 정도를 살펴보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서도 지역의 여건과 차이를 고려한 주민들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와 그에 대응하는 공급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성주인 외 2016). 중앙정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 단위로 세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이에 농어촌서비스기준 또한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의 여건 및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운용하는 것이 기존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인식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이 도입되었다(김광선 외 2015).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선정 및 제도화 추진 경과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은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2015년부터 제도화가 추진되었다. 선택 항목의 제정·운용은 지역별 상황과 여건, 지역의 발전 전략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역 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2015년 9개 시·도 연구원이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각 지역의 여건과 발전전략에 맞는 선택 항목을 선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각 연구원과 지자체의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 주민의 수요와 여건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였다. 연구수행 결과, 지자체별로 4~8개의 선택 항목이 선정되었으며, 총 55개의 선택 항목과 각 선택 항목에 해당하는 서비스기준의 내용 및 점검 방법이 도출되었다. 환경·경관 부문을 제외하고는 삶의 질 정책 부문별로 비교적 고르게 도출되었다. 선정된 선택 항목에 대하여 2015년을 기준으로 시·군 범위에서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실시하였다.

2016년도에는 선택 항목의 선정에서 발전하여 선택 항목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2015년도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치긴 했으나, 선정된 선택 항목이 지자체의 공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핵심 항목과는 달리 구체적인 목표치 또한 설정되지 못하였다. 이에 선택 항목을 비롯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선택 항목의 지자체 공인과 목표치 설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6년 12월 기준으로 9개도에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였으며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9년까지

4) 지역에 따라 2015년 선정된 선택항목의 수정, 변경 작업이 이루어졌다. 2016년말 기준 총복을 제외한 8개 시도에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관련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항목과 연도별 목표치를 확정하였으며, 충청북도 또한 선택

의 목표치를 확정하였다. 선택 항목의 제정·운영에 대한 강제적 조항⁵⁾이나,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도 농어촌 관련 모든 광역 자치단체가 선택 항목을 공식화하고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향후 선택 항목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 >>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선정 현황

지역	삶의 질 정책 부문							계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경기	2		2	2	2			8
강원		3	1	1	1			6
충북	1		2	1			1	5
충남	3		1				2	6
전북	2	1	1	1	2		1	8
전남			3				1	4
경북	1	1	1	2	1			6
경남	1	1	2	2	1	1		8
제주		1		4	1		1	7
계	10	7	13	13	8	1	6	58

새롭게 확정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에 대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시·도 연구원의 협동 연구를 통해, 목표치 대비 달성 수준 등 전반적인 이행실태에 대하여 시·군 수준에서의 점검·평가 작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항목 목표치 선정 및 최종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 중에 있다.

- 5) 「삶의질향상특별법」 제44조 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선택항목의 제정,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은 없다. 선택 항목의 제정,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은 없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은 핵심 항목과는 달리 지역의 여건과 발전 전략을 고려하여 선정한 내용이다. 따라서 선택 항목과 관련한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지역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11월 삶의 질 향상위원회 사무국의 조사 결과, 6개 지자체(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서 2017년 상반기에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을 위한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조례 제정 계획을 밝혔으며, 충남의 경우 기존 관련 조례의 바탕에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을 위한 시책의 추진을 언급하였다.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선택 항목 중 진료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하여 면지역 의료시설 접근성의 개선에 관한 선택 항목을 선정하였다. 면지역 의료시설 접근성을 40% 이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까지 전체 면지역 법정리 중 25% 이상의 지역이 1차 이상 의료시설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해당 항목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는 의료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보건소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리마을 주치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는 농어촌 지역 의료취약지역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관리와 소외계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에 매달 한 차례 이상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문, 진료·상담은 물론, 각종 건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6년 현재 170개 마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보완지표로 우리마을 주치의제도의 수혜 마을 비율을 선정하여 변화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윤정미 외 2016).

강원도는 2015년 소규모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선택 항목으로 선정하고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각 시·군의 통학버스 운영을 서비스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에듀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지역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강원에듀버스’ 사업은 개별 학교가 관리하던 통학버스를 시·군 교육지원청이 통합 관리하는 공유버스 방식으로 통학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본사업 실시를 추진 중에 있다. 당초 2019년도까지 전체 시·군의 68%가 에듀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해당 항목의 목표치로 설정했으나, 현재 전 시·군에서 에듀버스가 도입되어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완 지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강종원 외 2016).

제시된 사례 외에도 모든 지자체에서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을 통해 해당 분야의 서비스 개선 현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선택 항목이 각 지자체의 시책이나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어촌 지역의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자체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영의 성과 제고를 위한 과제

선택 항목을 포함하여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가 지역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고, 농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주체 각각의 노력이 요구된다.

삶의 질 향상위원회 및 사무국 차원에서는 각 지자체가 선택 항목을 체계적으로

선정·운영하고, 이행 실태에 대해 지속적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영 체제에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성실하게 관련 제도 및 제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근거나 자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2016년 선택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영 관련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나 정부 합동평가의 평가지표로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밀접한 선택 항목을 발굴·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선택 항목을 살펴보면, 슬레이트 정비 사업이나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같이 지역 간 선택 항목 간 유사한 내용이 발견된다. 또한 환경·경관 부문과 같이 모든 지자체가 선택 항목에서 배제하는 정책 영역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울러 일부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의 경우 그 내용이나 점검방법에 있어, 핵심 항목과의 차별성이 없거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존재한다. 이는 보다 다양한 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였던 선택 항목의 도입 취지와도 배치된다. 향후 선택 항목의 추가, 보완 작업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정주 개선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선택 항목들을 채택·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지자체의 주요 시책과 연계하여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질 향상 전문지원기관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지자체 서비스기준 이행실태에 관한 점검·분석을 수행하여, 지역별 제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무국, 지자체, 시·도연구원 및 전문가 등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❶ 김광선·엄진영·박유진·강민정. 2014.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❷ 성주인·송미령, 정문수, 민경찬. 2016.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의 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❸ 엄진영, 유은영, 류재현. 2015.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❹ 윤정미, 김정하. 2016. 『2016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리포트 제1호 (2015. 09)

2015년 7월 주거급여 개편 시행, 앞으로 과제는?

이슈리포트 제2호 (2015. 11)

지방교육재정 개혁, 농촌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는?

이슈리포트 제3호 (2016. 01)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 그 역할과 개선과제는?

이슈리포트 제4호 (2016. 03)

농촌의 영유아 보육, 그 실태와 개선 과제는?

이슈리포트 제5호 (2016. 07)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가 농어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중심으로

ISSUE REPORT

농어촌 서비스 기준, 그 성과와 과제는?

인 쇄	2016. 12.
발 행	2016. 12.
발행인	김창길
기 획	심재현
편 집	이정해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